



## 동물복지 축산의 오해와 진실



진중환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대학원 축산환경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류가 출현한 그 시점부터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동물로부터 가죽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야생동물을 가축화(家畜化)하였으며, 농사를 짓기 위한 역용(力用)으로 가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점차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의 활용범위와 취급에 대한 윤리의식도 함께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가축들의 복지까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문의하는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양질의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복지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갖게 하거나 혹은 지나친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복지가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화된 정보들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 (1) 국내 동물복지의 변화

#### # 동물복지 인식변화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시행이전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구매의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80%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

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소비자들의 계란구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 중 1위(51.6%)는 가격이었으며, 인증에 대한 유무를 살핀다는 답변은 4위(29.1%)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62.4%이었으며, '동물복지인증제도'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37.8%로 조사되었다(그림 1).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할 때 각종 인증 유무를 살핀다는 것은 축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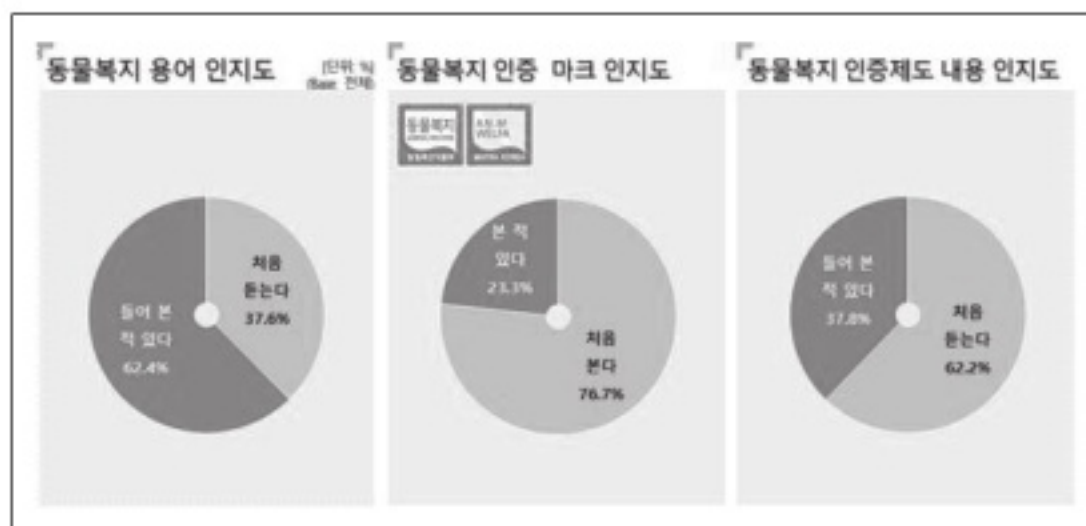


그림 1. 동물복지 계란 소비자 인식조사

## # 동물복지 정책변화

국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시기는 1991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찍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과 동시에 수많은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운동가들로부터 '개를 먹는 나라'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당시의 동물보호법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 제도는 동물

복지 인증기준에 맞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수는 산란계 115개소, 돼지 12개소, 육계 43개소 및 젓소 8개소로 총 178농가이다(그림 2). 그리고 동물복지인증농가 외에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일반 축산농가들도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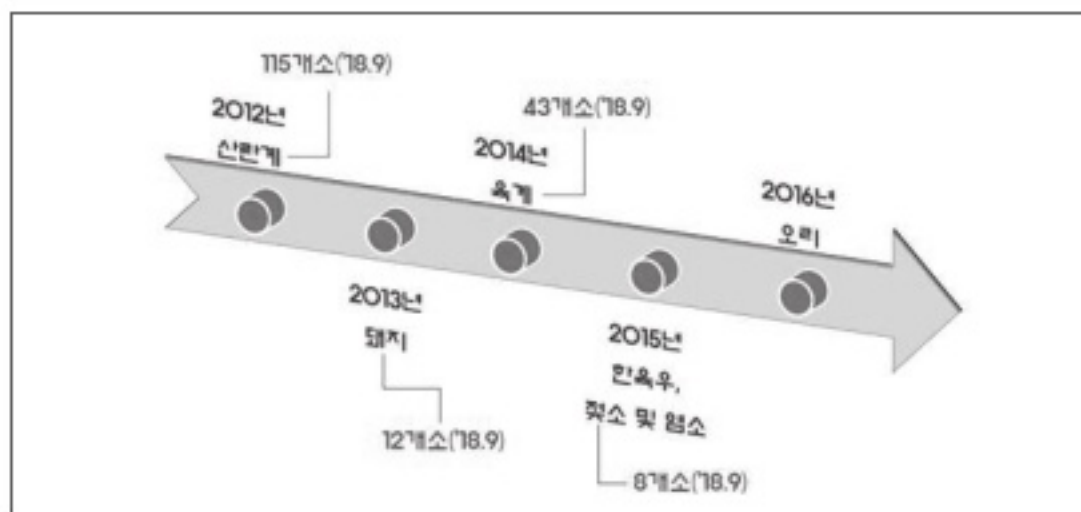


그림 2. 축종별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시기와 인증현황

## # 동물복지 사육여건 변화

가축의 동물복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유럽에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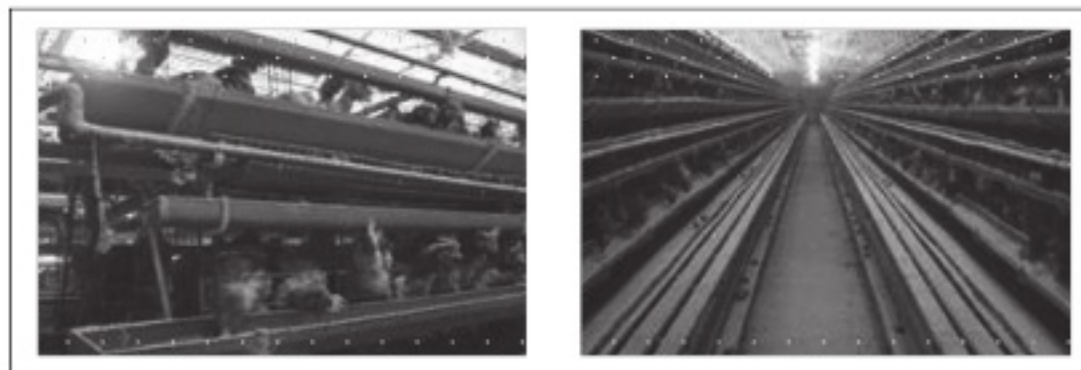


그림 3. 케이지 사육시설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들은 고작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면적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장 먼저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

동물복지적인 사육(평사사육, 방사사육)의 문제점들도 있는데 현재에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면서 가축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한 동물복지 사육시설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복지 사육시설들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가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란계의 다단식 사육시설과 돼지의 군사장치와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이 있는데 국내의 사육여건에 적합하며, 외국 제품에 비해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그림 4).



그림 4. 동물복지 사육시설

## [2] 동물복지의 오해와 진실

### # 동물복지와 채식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동물의 고통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물복지란 동물과 관련한 산업들을 부정하지도 않고 채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필요에 의해 동물들을 이용하고 사육하더라도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줄여주자는데 그 목적을 둔다. 즉, 축산 분야의 동물복지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주자는 것으로 관리방법이나 사육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채식은 신념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동물복지를 개선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동물복지 인증과 방사사육

동물복지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방사사육에 관한 것으로 가축이 방사사육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동물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사사육을 함으로써 가축들에게 더 많은 본능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사사육을 한다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양공급,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의하면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축종에서 실외 방목장 시설의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필수사항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 # 동물복지와 질병발생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어김없이 동물복지 축산을 소개하는 방송이 등장한다. 물론 동물복지 축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물복지적인 가축사육을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좋지 못한 사육환경과 가축관리가 가축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면역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가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면역능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면역능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적인 사육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정상화하여 질병에 대한 대항력을 키울 수는 있으나, 동물복지가 모든 질병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축산분야 동물복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인식, 법률, 사육여건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동물복지축산의 정착은 요원해질 수 있다. 급하게 동물복지를 서둘기 보다는 동물복지의 발전을 위한 여건들을 하나씩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